

[발표 1] 지식 커먼즈와 연구(자)의 삶

『문화/과학』 편집위원

권 범 철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이하 지식공유연대)의 선언문에는 “지식 생산 및 활용의 공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이 있다. 또한 지식공유연대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지식의 상품화는 중단되어야 하며, 널리 이롭게 쓰일 수 있는 지식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성 확대’, ‘공유’ 등 유사한 맥락에서 쓰이는 이 용어들은 지식공유연대의 활동과 이에 공감하는 연구자들에게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다. 지식의 사적인 전유는 중단되어야 하고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혹은 그것이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식의 공공성과 공유를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2019년 8월 지식공유연대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배성인은 공공성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공개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¹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식의 공공성은 보통 사적 전유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널리 이롭게 쓰이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논문을 에워싼 장벽을 제거하면 그만큼 논문은 널리 이용될 수 있고 그것의 사회적 가치는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때 지식의 공유는 그 일의 출발점으로 이야기된다. 위에서 언급한 선언문에서 오픈액세스(OA)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공유는 누구나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것의 공공적 가치 확대를 이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여러 모호한 문제가 남는다. 지식을 상품이 아닌 공유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면 공동체의 복리는 증진될까? 이때 공동체는 누구인가?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식을 누가 어떻게 생산하는가의 문제다.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포괄하는 지식공유연대 본래의 긴 이름 역시 이 연대체의 관심사가 단순히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지식공유연대의 선언문으로 돌아가 보자.

연구와 연구자의 삶

위에서 언급한 선언문은 사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글은 크게 두 가지 소주제로 나뉘는데 하나는 “지식 생산 및 활용의 공공적 가치 증진”을, 다른 하나는 “학문과 지식 생산의 공공성·합리성” 확대를 주장한다. 이 소제목만으로는 잘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술된 내용을 살펴 보면 전자는 지식의 상품화 반대와 공공성 확대, 즉 자유로운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후자는 오늘날 지식 생산 체제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생산된 지식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를, 후자는 지식 생산 과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공유연대는 이 선언문을 통해 지식의 이용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를, 더 나아가 지식의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순환 과정 전체를 문제화한다. 그 문제는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식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드미트리 클라이너의 말처럼

¹ 배성인, 「학문의 위기와 한국연구재단: 조직혁신 및 학술지원 정책 방안」,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와 연구자 공동 심포지엄>, 2019. 8. 29.

“모든 표현은 기존 인식의 확장이다. 아이디어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를 통틀어 축적된 지식의 커 위에서 만들어진다.”² 파푸아뉴기니 하겐 산 지역을 연구한 스트래든은 그곳의 사람들이 사물을 개인의 생산물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로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라 모든 사람과 물건들은 “다수의 저자들” 혹은 다수의 “기원”이나 “원천”을 갖게 된다.³ 우리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혼자서 연구하고 글을 쓸 때에도 언제나 복수의 주체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어디선가 듣고 읽은 것을 지워버린다면 나의 글에서 무엇이 남을까? 비단 연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언제나 복수의 사람들과 지식의 그물망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지식의 창출 혹은 연구의 생산성은 그 과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공통적인 것이 될 때 극대화된다. 네그리와 하트는 이를, 비물질적인 것은 쉽게 재생산되기 때문에 사유화나 공적 통제를 벗어나 공통적으로 되려는 경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혹은 대중 매체를 통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교환하거나 접한다. 소셜 미디어의 타임라인에는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줄을 지어 올라온다. 그러나 지식이나 정보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게 되면 이윤 창출의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에 자본은 인위적인 장벽을 세운다. 주지하다시피 지적재산권은 공통 재화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자본의 노력이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종종 실패한다. 음악이나 영화, 논문 등은 파일의 형태로 해적 사이트나 P2P 파일 공유 프로토콜을 통해 쉽게 공유되며 이를 막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다른 이윤 창출 방식이 시도된다. 비물질 형태의 지식이나 정보가, 자본의 바람과 달리 아무런 장벽 없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려울 때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원 판매보다 스펙터클한 이벤트에 집중하거나 파일 대신 흐름(스트리밍)을 — 콘텐츠의 선택 과정을 소비자에게서 알고리즘으로 점점 이전시키는 자동화 과정과 더불어 — 판매한다.

연구 논문의 경우는 어떠한가? 파일 형태로 응결된 연구 성과물 역시 쉽게 공유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비물질적인 공간들에는 그 공간들에 대한 물질적 기생체들이 있다.”⁴ 논문 중개 업체는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역시나 장벽을 세운다. 모든 논문들은 그 인프라 속으로 정렬되고, 대학을 비롯한 제도 기관들은 중개 업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제도 기관의 연구자는 중개 업체가 중개하는 연구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 물론 학생들은 그만큼 값비싼 등록금을 내야 한다 — 그렇지 않은 연구자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기관에 속한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빌릴 수도 있고 해적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책(특히 영어로 된)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터넷에서 파일을 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영화나 음악처럼 널리 공유되지 않는 건 논문이 그만큼 대중적이지는 않아서일까? 논문의 판매는 다른 비물질 재화와는 달리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에 따라 논문 중개 업체를 통한 논문 유통은 별다른 위기 없이 지속되고 중개 업체는 대학이라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유지한다.

연구자는 연구 생산물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이기도 하다.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이러한

² 드미트리 클라이너, 『텔레코뮤니스트 선언』, 권범철 옮김, 갈무리, 2014, 99.

³ 데이비드 그레이버, 『가치 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서정은 옮김, 그린비, 2009, 109에서 인용.

⁴ 맛테오 파스퀴넬리, 『동물혼』,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3, 222.

비물질 생산 과정에서 자본은 (산업 생산과 달리)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연구라는 비물질 노동은 노동자(연구자)들의 자율적인 협력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자본이 생산 과정 자체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고 해도 연구자들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화나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처럼 연구를 수행하는 환경 자체를 바꾸기 위한 시도가 일어난다. 학술지 논문 숫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 환경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이미 지적한 이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어쨌든 다른 식으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연구물의 생산은 이 노동 환경 속에서 경쟁적으로 조직된다. 다른 연구자보다 더 많은 논문을 — 가급적 해외 저널에 — 게재해야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학은 대학 평가 순위에서 도약하기 위해 더 많은 논문을 — 가급적 해외 저널에 — 생산할 수 있는 연구자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연구라는 실천은 점점 이 땅에서 유리되어 해외 저널이라는 궁극의 외부 척도를 중심으로 구름 위에서 활성화된다. 연구는 경쟁에 복무하는 추상적인 실천이 되었고, 대학과 연구자는 스스로 경쟁하는 주체가 되어 그 과정에 복무한다. 학술지 논문 생산 체제는 그야말로 삶정치적이다. 경쟁을 중심으로 한, 아니 경쟁 그 자체만이 유의미한 연구-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 체제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 그것의 실현가능성과는 무관하게 —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자본의 가치화를 중심으로 조직된 그 과정이 경쟁하는 주체로서의 주체화 과정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학술지 논문 양산 체제의 핵심은 자유롭게 전개될 수도 있는, 어디로 나아갈 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연구-노동자를 예측 가능한 노동력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 요컨대 연구자를 길들이고 통제하는 것, 그것이 그 체제의 목적이다. 해리 클리버는 이윤 창출이 우리에게 일을 부과하여 우리를 통제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본주의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맑스를 인용하면서 “자본주의가 잉여 노동을 발명한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가 발명한 것은” “노동의 끝없는 부과”라고 주장한다.⁵ 다시 말해서 자본에게 이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계획할 수 없는 자본의 요소”인 “노동계급”⁶을 끝없는 노동 부과 속에서 계획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의 말을 따르다면 학술지 논문 양산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의 이윤 창출이라기보다, 위계화된 학계 일자리와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연구자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많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꿈이 임노동자(정규직 교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 그 꿈의 실현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논문을 써야 한다는 점만은 확실하다는 사실은 이 노동 환경이 연구자를 통제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구자들은 학술지 논문 양산이라는 이 체제가 살아남는 한 논문의 “끝없는 부과” 속에서 계획 가능한 요소가 되고, 논문을 꾸준히 쓰면서 그 체제를 다시 재생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 즉 공유는 지식의 삶에, 또 연구라는 활동의 삶에 분명 크게 기여할 것이다.

⁵ Harry Cleaver, *Rupturing the Dialectic: The Struggle against Work, Money, and Financialization*, (AK Press, 2017), 83.

⁶ 해리 클리버, 『자본론의 정치적 해석』, 권만학 옮김, 풀빛, 1986, 90.

그렇지만 지식과 연구의 삶의 증진이 공동체의 복리에,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에, 연구자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삶은 그다지 안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은 연구의 삶에는 기여하겠지만 연구자의 삶에는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연구라는 실천 자체는 활성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삶은 여전히 척박할 것이다. 지식의 공유가 불안정한 소득 속에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경주해야 하는 삶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자체가 경쟁을 중심으로 한 추상적인 실천이 되는 상황에서 그것의 생산물(논문)이 공동체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끼칠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학술지 논문의 활성화는 어느 정도는 연구자의 불안한 삶에서 기인한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안정을 바라는 연구자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험으로 논문 생산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교수직을 이미 획득한 연구자도 정기적으로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자도 교수직을 획득하기 위해 혹은 각종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써야만 하는 것이 바로 논문이다.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논문의 숫자는 늘어가지만 그것이 개별 연구자(특히 비정규직 연구자)의 삶의 지표 개선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의 삶과 연구자를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의 삶 사이에는 어딘가 끊어진 고리가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작년 8월의 그 심포지엄에서 박서현이 잘 정리한 것처럼 지식 공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식 생산 양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⁷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의 공유를 단지 그것의 자유로운 이용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지식 커먼즈의 중요한 영역을 놓치게 된다. 지식 생산자의 삶이 그것이다. 그러나 누가 지식의 생산자인지도 혼란스럽다. 우리는 지식이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점에 쉽게 동의하면서도 그것의 생산자를 좁게 한정하곤 한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은 지식의 생산자인가 소비자인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생산되는 지식은 교수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학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강의와 세미나, 발표, 토론 등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생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원)생은 자기자신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인 노동력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다. 그러나 그들이 임금을 받기보다 오히려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감추고 그들을 소비자로 부각시킨다. 그들이 ‘학업의 끝없는 부과’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획 가능한 자본의 요소로 만들고 있음에도 말이다. 또한 대학에서 청소·관리·조리 등을 수행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지식 생산자일 수 없다고 여겨지지만 여러 대학에서 일어난 그들의 투쟁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선사하면서 대학을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⁸ 무엇보다 그들은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를 매일 재생산한다. 그들이 없다면 대학의 술한 ‘지식’ 생산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이들 — 학생과 학내 재생산 노동자 — 을 소비자로 취급하거나, 지식 생산과는 무관한 ‘비생산적인’

⁷ 박서현,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공유의 과제」,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와 연구자 공동 심포지엄>, 2019. 8. 29.

⁸ Silvia Federici, “The University: A Knowledge Common?” in *Re-enchanting the World: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PM Press, 2019) 참고.

이들로 간주하며 그들의 노동을 가치절하하고 그만큼 무상으로 흡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대학은 그들의 노동을 무상으로 흡수하여 지탱되는 뒤집어진 커먼즈다.

지식 커먼즈를 살아가기

뒤집어진 커먼즈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뒤집어진 커먼즈가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 생산자들의 노동을 가치절하하여 무상으로 흡수하는 자본의 커먼즈라면, 지식 커먼즈는 그와 달리 지식 생산자들의 대안적인 삶의 양식이어야 한다. 커먼즈는 우리가 공유하는 재화만이 아니라 새로운 집합적 주체가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식 커먼즈는 인터넷에 연결된 어느 서버에 저장된 지식에 우리가 무상으로 접근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생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꾸리고 살아가는 일이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파편화되어 각자도생하고 있는 문화”⁹를 넘어서 새롭게 연결되는 과정이다. 즉 문제는 지식 생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다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이다. 그러므로 공유해야 할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다. 이 ‘우리’는 대학 안팎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들뿐 아니라 대학을 비롯한 그 연구 공간들을 재생산하는 노동자들까지 포함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부하고 글을 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다 지식의 생산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지식은,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 듣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지식은 그 과정에 연결된 모든 이들의 공동 생산물이다. 따라서 지식 커먼즈는 지식을 공유하고 (학술지 논문 양산 체제가 아닌) 새로운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지식이라는 공통의 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 새로운 관계 구성에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큰 난관은 ‘우리’가 너무나 분리되어 있고 위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도 내 연구자와 제도 밖 연구자, 교사와 학생, 학내 이용자(교사와 학생)와 학내 재생산 노동자, 교수와 강사 등은 상이한 영역에서 고립된,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리된 혹은 위계화된 관계들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분리되거나 위계화된 관계들을, 서로 소비하거나 지시하는 관계들을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 수평적인 관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폐를 매개로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이 순환하는 관계를 생성하는 것이다. 상품은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 지식이 상품으로 유통될 때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구분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우리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와 달리 우리가 지식을 공유한다(communing)고 말할 때, 그것은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생산한다는 의미도 포괄한다. 그리고 그 지식의 생산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리된 관계를 넘어서 함께하는 ‘우리’를 생산한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상품과 공유(물)의 가장 큰 차이이다. 여기서 지식의 생산은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공간의 재생산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지식의 생산이란 후자를 포함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여러 커먼즈 연구자들이 커머닝의 형태로 사회적 노동을 가동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한다.

⁹ 천정환 인터뷰. 「“논문은 공유재” 21세기형 지식인운동 닷 올린다」, 『한겨레』, 2020.2.21,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29089.html>.

그 중에서 데 안젤리스는 그 두 가지를 공동 노동(communal labour)과 호혜 노동(reciprocal labour)이라고 부른다. 공동 노동이 공유인들(commoners)의 공동체가 회의에서 정한 특정한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적 노동이라면, 호혜 노동은 호혜성이나 선물 혹은 상호 부조에 대한 지각과 얽혀 있는 사회적 노동 형태다. 이 두 노동은 구별되지만 상호보완적이다. 공동 노동이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체가 협력하는 노동을 나타낸다면, 호혜 노동은 호혜성의 순환을 통해 공동체의 사회 구조를 짜는 것이다. 데 안젤리스는 농경 사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던 이 두 가지 커머닝 형태가 현대 도시에서 새롭게 재발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로 나타났던 미국과 스페인의 주택 압류 반대 운동을 예로 든다. 활동가 집단은 거주민이 은행 집행관에게 저항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는 도움을 받은 그 거주민이 투쟁에 참여하도록 요청(혹은 초대)하여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도록 이끈다. 여기에는 압류에 저항한다는 공동의 사업과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저항에 힘을 보태는 호혜성이 함께 있다. 데 안젤리스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네트워크는 메트로폴리스의 개인화 경향에 중대한 파열을 나타낸다.”¹⁰

데 안젤리스의 말처럼 이 두 가지 커머닝 형태가 사회적 노동을 가동하는 유일한 기준은 물론 아니지만 지식 커먼즈라는 맥락에서도 이 두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식공유연대의 선언문을 따르다면 지식 생산 체제의 재구성과 지식 공공성 확대는 공동의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지식공유연대라는 연대 기구에 함께하는 여러 학회와 연구자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의 사업을 한결같이 추진하려면 그것의 주체, 즉 그 연대체의 짜임새가 중요하다. 그 짜임을 만드는 것은 호혜 노동이다. 이것은 위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 관계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 연대체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다. 그 각각의 개인을 가로지르는 여러 사회적 선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이 연대체가 꾸러졌지만, 그 선들은 다른 공간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지식 생산자 ‘우리’를 고립시키고 분리하고 위계화하는 관계로 말이다. 그 술한 관계들의 조합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즉 호혜성을 꾸리지 못한다면 지식공유라는 공동의 사업 역시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아니 공동의 사업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식 생산 체제의 재구성이란 사실 그 호혜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지식공유연대에 함께 하지는 않지만 지식의 장을 함께 (재)생산하는 가시화되지 못한 노동자들과도 서로 책임을 갖는 관계를 꾸리지 못한다면 지식의 공유라는 것은 얼마나 공허할 것인가. 누군가의 삶을 배제한 채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공유, 공공성 확대는 지식을 위한 지식 활성화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렇게 활성화된 지식은 결국 각종 평가 보고서의 잘 정리된 표에 갇힌 숫자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커머닝과 자본주의적 노동의 핵심적인 차이는 그것의 가치를 설정하는 척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달려 있다. 커머닝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 가치의 척도를 설정한다면

¹⁰ Massimo De Angelis, *Omnia Sunt Communia: On the Commons and the Transformation to Postcapitalism* (London: Zed Books, 2017), 219.

자본주의적 노동에서는 그 척도가 외부에서 결정된다.¹¹ 오늘날 한국 학계의 지배적인 연구 생활이 — 앞서 인용한 클리버의 말을 따르다면 — ‘끝없는 노동의 부과’라는 목적 하에 외부에서 설정된 ‘논문 게재 숫자’라는 단 하나의 척도에 의해 가동된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러한 연구는 공동체의 복리와도, 연구자의 삶과도 무관한 경쟁 그 자체를 위한 경쟁적인 실천에 불과하다. 지식 커먼즈는 무엇보다 하찮게 되어버린 그 연구, 그것의 무의미한 (게재) 숫자 늘리기를 벗어 던지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자본은 끝없이 노동을 부과하며 예측 불가능한 존재를 계획할 수 있는 요소로 치환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며 배웠듯이 그 시도는 언제나 실패를 거듭해 왔다. 또한 우리는 ‘끝없는 논문의 부과’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 친구들을 안다. 지식공유연대의 출범 역시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닐까? 부르디외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다른 연구-삶의 방식이 정말 가능한가를 학술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¹¹ Ibid., 210.